

경남도, 조선업 특화 고용서비스 원스톱 제공

지역 이모저모

‘경남 조선업 도약센터’ 개소식

맞춤형 취업상담·사후관리
‘취업정착금 플러스 사업’도

경상남도는 심각한 조선업 구인난을 해소하고 조선업 재도약을 위해, 10일 ‘경남 조선업 도약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고용노동부 정경훈 노동시장정책관, 양성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경남도 노영식 경제개발국장, 박종우 거제시장, 삼성중공업 신현호 부사장, 대우조선해양 이영호 부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개소식 이후에는 현장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경남 조선업 도약센터는 고용노동부의 ‘2023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가 공모에 선정되어 3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문을 열게 되었다.

경남 조선업 도약센터는 경남지역 조선업 특화 취업지원 플랫폼으로서, 조선업 맞춤형 1:1 취업상담부터 사



10일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서 열린 ‘경남조선업도약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정경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양성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노영식 경남도 경제개발국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개소 기념테이프를 자르기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남도

후관리까지 조선업에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주요사업은 ▲조선업무 직무연계를 위한 전문상담사의 1:1 조선업 매칭 고용서비스(취업상담 청구 운영) ▲조선업 인식개선·취업특강 등 단기 프로그램 운영 ▲조선업 채용박람회 개최 등으로, 다양한 조선업 맞춤형 특화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신규인력 유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조선업 도약센터의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 후 조선업종에 취업하여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을 지

급하는 ‘취업정착금’ 및 2022년 취업정착금 수혜자 중 1년 근속 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취업정착금 플러스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상담을 받는 구직자에게 취업 알선과 더불어 경남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경남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국비 78억 원 등 총 98억 원 사업비로 ▲ 정부-지자체-근로자 3자 적립으로 1년 만기 시 600만 원을 지원하는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 만 35세~49

세까지 최저임금의 120%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 원청 기술훈련원 훈련생 대상,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지원 ▲ 만 50세 이상이고 경력 10년 이상의 조선업 생산직 정년퇴직자 및 경력자 채용 시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각각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숙련 퇴직자 재취업지원 등 총 4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남=김영찬 기자

metrobusan3@metroseoul.co.kr

전남도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 최다 국비 143억 확보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에 전국 25개 섬 중 최다인 16개 섬이 선정돼 국비 14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고흥,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등 5개 군 16개 섬엔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분야별 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주하기 위한 필수시설을 우선 지원해 소외된 작은 섬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부산시

‘행정통합 제2차 토론회’

부산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토론회는 박종훈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이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의 선결 요건과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이후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지정 토론에는 배준구 경성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재욱 신라대학교 교수, 박재욱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송호진 성결대학교 교수, 안소동 보좌관(이달곤 국회의원 보좌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지난 4월 27일 경남도청에서 개최된 제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부산-경남 간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논의를 연속성 있게 이어가고자 15일 부산시청에서 제2차 토론회, 오는 24일 진주시산업센터에서 제3차 토론회를 연다. /부산=심재만 기자 metrobusan4@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역량 결집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 경북도 중심 항공물류시설 핵심

경상북도가 ‘중남부권의 항공물류허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해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다시 한 번 결집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9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대구경북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해 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과 시군 관계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시군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기업인과 주민대표 등 60여명으로, 공동위원장은 문중도 경상북도상공회의소합의회장과 이철재 경상북도이동장협의회장이 맡았다.



신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식 사진.

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청취와 소통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과 공항을 활용한 시군별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정치권에 지역의 요구를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미 6천164세대, 1만5천410명 규모의 주거단지과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4개 권역의 공항

신도시 개발계획과 항공물류육성 기본계획도 마쳤다.

그중에서도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등 항공물류기반 구축은 공항을 통한 새로운 경북도 건설 구상의 핵심이다. 경북도가 중심이 되어 항공물류시설을 건설하고, 기업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대구시, 제2국가산단 사업시행자 선정

국토부, LH공사와 공동으로 확정

대구광역시 100만 평 규모의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시작한다.

올해 3월 15일 국토부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달성군 화원읍~옥포읍 일원(면적 329만㎡)이 선정된 이후 대구광역시는 제2국가산단 조성을 원활히 수행할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여러 공공기관과 협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역 내 다수의 산단개발 경험으로 숙련도가 우수하고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한 분담이 가능한 LH

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 공동 사업시행 방식을 선정해 국토부에 건의했고, 지난 5월 4일 국토부에서 열린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에서 확정됐다.

특히, LH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는 현재도 대구제1국가산업단지(달성군 구지면 일원 / 조성면적 856만㎡ / 사업기간 2009~2024년)와 대구울하도시점단산업단지(동구 울하동 일원 / 조성면적 17만㎡ / 사업기간 2017~2023년) 공동 개발 중임에 따라 축적된 협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대구광역시는 제2국가산단의 입지적 우수성과 이에 따른 기업수요를 바

탕으로 ‘현 정부 1호 국가산단’으로 지정받기 위해 어느 지자체보다도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국가산단은 교통, 인프라, 도심과의 접근성 등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선호하는 최적의 산업단지 입지를 자랑하고 최근 지역 내 미래차, 배터리 등 모빌리티 분야의 투자유치가 폭발적으로 증가 중임에 따라 수요기업 확보는 원활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기재부에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내년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관련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25년 말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보상절차를 진행해 2030년 산업단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김삼복 기자 ksb8100@

울주군

‘영남알프스 별빛투어’ 개최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별 관측 체험행사 ‘2023 영남알프스 별빛투어’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주항공분야에 관심을 가진 어린이에게 우주에 대한 꿈과 상상력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영남알프스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병풍삼아 낮에는 태양관측 전문장비로 태양의 흐름을 관찰하고, 별자리 이야기를 들으며 ‘LED 별자리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또 가족과 함께 ‘LED 에어로켓’을 만들어 직접 날리면서 로켓의 작동원리와 과학상식을 배울 수 있다. /울주(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대전시

미환급 지방세 찾아가세요

대전 시민들은 5월 한 달간 찾지 않았던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미환급된 지방세는 총 1만5876건, 7억8305만원에 달한다.

대전시는 이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대전시 자동응답(ARS) 수납시스템, 5개 관할구청 등을 통해 가능하다. 사전에 위택스로 지방세 환급계좌를 신고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5개 자치구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지방세 환급을 안내 중이다. /대전=원승일 기자 won@

산청군

농식품부, 농촌협약사업 추진

산청군이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정비 사업 추진 등 ‘모두가 살고 싶은 산청’ 만들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청군이 체결한 농촌협약사업을 비롯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농촌협약사업은 산청군이 수립한 남부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농식품부가 패키지로 국비를 지원하고 경남도와 산청군은 지방비를 편성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협약기간은 5년(2022~2026년)으로 사업비 221억원이 투입된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

강진군이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2023년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재정비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와 마을 경관 훼손을 예방하는 동시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도와, 군 정주 인구를 끌어올리기 위한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되었지만, 올해에는 지원금을 늘리는 등 사업 범위를 확대해 추진한다.

빈집을 수리해 장기 임대하는 경우, 기존 5천만 원이었던 지원금을 임대 기간에 따라 최대 7천만 원까지 확대해 차등 지원한다.

/강진(전남)=양수녕 기자